감정평가 관계 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는 때부터 발생한다.

②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인접한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학교 ② 녹지 ③ 하천

④ 주차장 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계획관리지역	**ㄴ. 자연녹지지역**
ㄷ. 근린상업지역	**ㄹ. 제2종일반주거지역**

① ㄷ-ㄹ-ㄱ-ㄴ ② ㄷ-ㄹ-ㄴ-ㄱ ③ ㄹ-ㄱ-ㄷ-ㄴ ④ ㄹ-ㄷ-ㄱ-ㄴ ⑤ ㄹ-ㄷ-ㄴ-ㄱ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ㄱ)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 **○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ㄴ)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① ㄱ: 10, ㄴ: 지목이 대
② ㄱ: 10, 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③ ㄱ: 1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④ ㄱ: 20, ㄴ: 지목이 대
⑤ ㄱ: 20, ㄴ: 용도지역이 관리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되는 날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②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단, 조례 및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20퍼센트 ② 50퍼센트 ③ 80퍼센트 ④ 100퍼센트 ⑤ 125퍼센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① 방재지구 ② 방화지구 ③ 복합용도지구
④ 개발진흥지구 ⑤ 특정용도제한지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ㄴ):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ㄷ):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①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②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③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④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보전녹지지역
⑤ ㄱ: 제3종일반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100만 제곱미터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④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않은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 **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 **ㄷ.「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 **ㄹ. 관리지역의 산림 중「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다가구주택 ② 다세대주택 ③ 아파트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⑤ 노유자시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 귀속된다.

④ 군수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마쳤다면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를 통지할 필요가 없다.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감정평가사가 각각 3명이면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④ 자본금 미달은 감정평가법인의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업무를 한 경우 가중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② 감정평가사 결격사유는 감정평가사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사유가 된다.

③ 감정평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④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⑤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의 연수과정을 마치지 않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토지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의 해산이나 폐업시 제출받은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은 동일하다.

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이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택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1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그 해 6월 1일까지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기준일 이후「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공동주택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지가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3.3제곱미터로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④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표준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②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선박, 지상권,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이 포함된다.

③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확정판결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21. 국유재산법령상 무단점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한 자는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은「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할 수 있다.

③ 무단점유자가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는 중앙관서의 장등이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④ 변상금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22. 국유재산법령상 총괄청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의 요구

②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의 요구

③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한 그 소관 중앙관서 장의 지정

④ 중앙관서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차입

23.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3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해당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⑤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때 쌍방의 가격이 같지 아니하면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하여야 한다.

24.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된다.

⑤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50층의 공동주택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의 숙박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으면「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건축허가시 실시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1층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⑤ 2층 건축물이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증축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6.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②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③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④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 에너지이용 관리계획

27. 건축법령상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ㄱ.「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 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ㄷ.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ㄹ.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ㅁ.「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ㄱ, ㄴ,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창고용지 ② 공장용지 ③ 수도용지 ④ 주택용지 ⑤ 철도용지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지적공부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적정보관리체계에 기록·저장한 지적공부가 멸실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대지권 비율 ④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⑤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경계점 위치 설명도 ④ 경계점의 사진파일

⑤ 경계점 위치의 토지소유자 성명

32.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없다.

④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33. 부동산등기법령상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수용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에 관하여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⑤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자는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4.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모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 할 수 없다.

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3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소유권 ② 지역권 ③ 권리질권 ④ 유치권 ⑤ 채권담보권

3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기명채권증서 ㄴ. 화물상환증이 작성된 동산 ㄷ.「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ㄹ.「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ㄹ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된다.

②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임원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하는 방법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4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회계학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답지항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41. 투자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한다.

② 소유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치에 포함한다.

③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한다.

⑤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42. (주)감평과 (주)한국은 사용 중인 유형자산을 상호 교환하여 취득하였다.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교환 시 (주)감평이 (주)한국에 추가로 현금 ₩200,000을 지급하였다. 이들 자산간 교환취득을 상업적 실질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주)감평이 인식할 유형자산 취득원가(A)와 (주)한국이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이익(B)은? (단, 두 자산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입장에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다는 증거는 없다.)

구분	(주)감평	(주)한국
취득원가	₩2,250,000	₩1,5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50,000	600,000
공정가치	950,000	1,150,000

① A: ₩950,000 B: ₩250,000 ② A: ₩950,000 B: ₩450,000

③ A: ₩1,050,000 B: ₩450,000 ④ A: ₩1,150,000 B: ₩250,000

⑤ A: ₩1,150,000 B: ₩450,000

43.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100,000인 경우, 재평가모형 적용 시 인식할 재평가잉여금은?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⑤ ₩60,000

44.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6,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20x1년 말 이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한 결과 회수가능액이 ₩2,232,000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동 금액과 장부금액 간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한편, 20x2년 말 기계장치의 회수가능액이 ₩4,000,000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주)감평이 20x2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① ₩1,574,000 ② ₩1,926,000 ③ ₩2,138,000 ④ ₩2,326,000 ⑤ ₩2,568,000

45.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ㄴ.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ㄷ.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 및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그것을 외부에서 창출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취득이나 완성 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한다.
ㄹ.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는 검토하고, 잔존가치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ㅁ.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46. (주)감평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액면금액 ₩5,000,000, 만기 6개월, 표시이자율 연 6%)을 받았다. (주)감평은 동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 은행에 할인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995,500을 받았다. 동 어음에 대한 은행의 연간 할인율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① 8% ② 10% ③ 12% ④ 14% ⑤ 16%

47.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ㄴ.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ㄷ.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 ㄹ. 새로운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ㅁ. 설치장소를 준비하는 원가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48. (주)감평은 20x1년 초 기계장치(취득원가 ₩5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를 취득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말 동 자산에 손상징후가 존재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기계장치의 처분공정가치는 ₩25,000, 처분부대원가는 ₩3,000, 그리고 사용가치는 ₩23,000으로 확인되었다. (주)감평이 원가모형을 채택할 때, 동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20x1년도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① ₩4,000 ② ₩5,000 ③ ₩6,000 ④ ₩7,000 ⑤ ₩8,000

49. (주)감평은 20x1년 초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20,00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판매회사 장부상 금액은 각각 ₩12,000,000, ₩3,000,000, ₩10,000,000이며,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공정가치 비율은 7 : 1 : 2 이다. (주)감평이 인식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① ₩4,000,000 ② ₩5,000,000 ③ ₩6,000,000 ④ ₩7,000,000 ⑤ ₩8,000,000

50.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주)대한에 판매를 위탁하고 있다. (주)감평은 20x1년 초 단위당 판매가격이 ₩2,000(단위당 원가 ₩1,400)인 건강식품 100단위를 (주)대한에 발송하였으며, 운반비 ₩8,000을 운송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주)대한은 (주)감평으로부터 수탁한 건강식품 중 60 %를 20x1년도에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판매금액의 5 %를 (주)대한에 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거래로 20x1년도에 (주)대한이 인식할 수익(A)과 (주)감평이 인식할 매출원가(B)는?

① A: ₩6,000 B: ₩84,000 ② A: ₩6,000 B: ₩88,800

③ A: ₩6,240 B: ₩84,000 ④ A: ₩6,240 B: ₩88,800

⑤ A: ₩8,000 B: ₩84,000

51. (주)감평은 20x1년 중 (주)한국이 주문한 맞춤형 특수기계를 ₩10,000에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x1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2,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8,000이다. 20x2년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한 원가상승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12,000으로 변경하였다. 20x2년에 발생한 제작원가는 ₩4,000이고, 추정 총원가는 ₩10,000이다. 이 기계는 20x3년 3월 31일에 완성되었다.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측정할 때, (주)감평이 동 계약과 관련하여 20x2년도에 인식할 이익은?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⑤ ₩700

52.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세무조정사항 등 법인세 계산 자료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은?

○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24,000이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10,000이다.
○ 20x1년 초 전기이월 이연법인세자산은 ₩7,500이고, 이연법인세부채는 없다.
○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이고, 이후에도 매년 이 수준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 과세소득에 적용될 세율은 25 %이고, 향후에도 변동이 없다.

① ₩37,500 ② ₩40,500 ③ ₩43,500 ④ ₩45,500 ⑤ ₩48,500

53. (주)감평은 리스이용자로 사무실용 건물을 20x1년 초부터 4년간 리스하는 계약(연간리스료 매년 말 ₩90,000 지급)을 체결하였다. (주)감평은 리스개시일인 20x1년 초에 리스부채로 ₩311,859을 인식하였다. 한편, 2년이 경과된 20x3년 초 (주)감평은 리스회사와 매년 말 연간 리스료 ₩70,000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0x3년 초 리스변경을 반영한 후 (주)감평의 리스부채 장부금액은? (단,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으나, 리스개시일과 20x3년 초 리스이용자인 (주)감평의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연 6 %와 연 8 %이다.)

기간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	8 %
1	0.9434	0.9259
2	1.8334	1.7833
3	2.6730	2.5771
4	3.4651	3.3121

① ₩124,831 ② ₩128,338 ③ ₩159,456 ④ ₩231,847 ⑤ ₩242,557

54. (주)감평의 20x1년도 회계오류 수정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500,000이다. 오류 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0년	20x1년
기말재고자산 과대(과소)계상	₩12,000 과소	₩5,000 과대
선급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4,000	₩3,000

회계오류 수정 후 (주)감평의 20x1년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① ₩476,000 ② ₩482,000 ③ ₩486,000 ④ ₩488,000 ⑤ ₩492,000

55.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자차익
ㄴ. 주식선택권
ㄷ.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ㄹ. 이익준비금
ㅁ.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56.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다. 아래의 각 상호 독립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보고기간말 이후 발생한 것이다.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석으로 공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ㄱ. 관계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30,000의 지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ㄴ. 생산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50,000의 생산설비가 파손되었다.
ㄷ. 20x1년 말 현재 피고로 계류중이던 손해배상소송에서 ₩10,000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ㄹ. 내부규정에 의해 20x1년 말 지급하여야 할 상여금 지급액이 ₩25,000으로 확정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ㄴ, ㄷ, ㄹ

57. (주)감평은 (주)대한을 합병하고 합병대가로 ₩30,000,000의 현금을 지급하였다. 합병 시점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0,000,000이고 부채총액은 ₩11,000,000이다. (주)대한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와 같다. 토지는 장부상 ₩10,000,000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합병 시점에 공정가치는 ₩18,000,000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합병으로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① ₩9,000,000 ② ₩10,000,000 ③ ₩13,000,000 ④ ₩21,000,000 ⑤ ₩23,000,000

58.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기준은 역사적 원가이다.

②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 추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③ 부채에 현행원가 개념을 적용하면 현재시점에서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회계를 적용할 때 고려하는 사용가치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다.

⑤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특정 측정기준의 선택과정을 포함한다.

5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채는 과거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미래에 기업실체가 부담할 의무로서 현재 그 의무를 이행한다.

②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거나 그 항목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한다.

③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 소비됨으로써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④ 자산의 사용정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감가상각비는 관련 수익과의 관련성이 직접적으로 파악, 결정되는 비용이다.

⑤ 표현충실성을 위한 서술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정보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에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60.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6%, 매년 말 이자지급)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사채의 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8%이었다. (주)감평은 20x2년 6월 30일 사채를 조기상환하였다. 조기상환시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은 ₩32,000이다. (주)감평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때,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사채조기상환금액은? (단, 이자비용은 월할계산하고,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6%	8%	6%	8%
1	0.9434	0.9259	0.9434	0.9259
2	0.8900	0.8574	1.8334	1.7833
3	0.8396	0.7938	2.6730	2.5771

① ₩970,872 ② ₩996,300 ③ ₩1,004,872 ④ ₩1,034,872 ⑤ ₩1,073,444

61.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500,000의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액면발행하였다.

○ 표시이자율: 연 6%(매년 말 지급)
○ 전환사채 발행당시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10%
○ 만기일: 20x3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만기 상환조건이 액면상환조건인 경우의 전환권대가(A)와 할증상환조건(보장수익률 8%, 상환할증금 ₩32,464)인 경우의 전환권대가(B)는?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8%	10%	8%	10%
3	0.7938	0.7513	2.5771	2.4869

① A: ₩24,878 B: ₩488 ② A: ₩25,787 B: ₩17
③ A: ₩25,787 B: ₩25,353 ④ A: ₩49,743 B: ₩25,353
⑤ A: ₩49,743 B: ₩17

62.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에 대한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최초 인식시점이라 하더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없다.

② 측정이나 인식의 불일치, 즉 회계불일치의 상황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 모두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한다.

③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일 수는 없다.

④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액(손상차손)은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기대신용손실환입액(손상차손환입)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측정범주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 차이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63. **(주)감평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소매재고법을 적용하고 있다. 20x1년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평균원가법에 의한 20x1년 말 재고자산은?**

항목	원가	판매가
기초재고액	₩143,000	₩169,000
당기매입액	1,138,800	1,586,000
매가인상액		390,000
인상취소액		150,000
매가인하액		110,000
당기매출액		1,430,000

① ₩211,000 ② ₩237,000 ③ ₩309,400 ④ ₩455,000 ⑤ ₩485,400

64. **(주)감평의 당기 매출총이익률은 30 %이고, 기초재고자산원가는 ₩2,000,000, 당기순매입원가는 ₩6,000,000, 순매출액은 ₩10,000,000일 때, 기말재고자산원가는?**

① ₩500,000 ② ₩1,000,000 ③ ₩3,000,000 ④ ₩5,000,000 ⑤ ₩7,000,000

65. **(주)감평은 20x1년 12월 31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이 ₩7,810,000이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회사의 12월 31일 현재 총계정원장상 당좌예금 잔액과 불일치하였다. (주)감평이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였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주)감평의 수정 전 당좌예금계정 잔액(A)과 수정 후 재무상태표에 당좌예금으로 계상할 금액(B)은?**

> ○ (주)감평이 발행하고 인출 기록한 수표 ₩2,100,000이 은행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 ○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 예금한 수표 ₩1,500,000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주)감평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다.
> ○ 주거래은행에 추심의뢰한 받을어음 ₩500,000이 (주)감평의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처리되었으나, 통보받지 못하였다.
> ○ 지난 달 주거래은행에 현금 ₩190,000을 당좌예입하면서 회계직원의 실수로 장부상 ₩910,000으로 잘못 기장된 것이 확인되었다.

① A: ₩5,990,000 B: ₩5,210,000 ② A: ₩5,990,000 B: ₩5,710,000

③ A: ₩7,430,000 B: ₩5,710,000 ④ A: ₩7,430,000 B: ₩6,430,000

⑤ A: ₩9,530,000 B: ₩7,310,000

66. (주)감평의 20x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다.

자산총계	₩880,000	비유동부채	₩540,000
매출채권	120,000	자본총계	100,000
재고자산	240,000		
비유동자산	520,000		

만약 (주)감평이 현금 ₩50,000을 단기차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거래가 당좌비율(A)과 유동비율(B)에 미치는 영향은?

① A: 영향 없음 B: 영향 없음 ② A: 감소 B: 증가

③ A: 감소 B: 감소 ④ A: 증가 B: 증가

⑤ A: 증가 B: 감소

67. (주)감평의 20x1년도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	우선주
1월 1일	발행주식수	6,400주	5,000주
4월 1일	유상증자	2,000주	-
7월 1일	무상증자 20%	1,680주	-
12월 31일		10,080주	5,000주

4월 1일 유상증자한 보통주 1주당 발행금액은 ₩1,600이고, 권리락 직전일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이다. 우선주 1주당 배당금은 ₩60이고,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3,360이다. 20x1년도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월할계산한다.)

① ₩110 ② ₩120 ③ ₩130 ④ ₩140 ⑤ ₩150

68. (주)감평의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800,000으로 보고되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간접법으로 구한 20x1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 토지(장부금액 ₩3,000,000) 처분금액	₩3,100,000
○ 매출채권(총액) 증가	165,000
○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증가	5,000
○ 매입채무 증가	80,000
○ 매출채권손상차손	20,000
○ 감가상각비	120,000
○ 개발비 지출	180,000

① ₩740,000 ② ₩760,000 ③ ₩840,000 ④ ₩900,000 ⑤ ₩920,000

69. (주)감평의 20x1년도 이자비용 ₩30,000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3,000이 포함되어 있다. 미지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3,800과 ₩5,200이고, 선급이자비용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은 각각 ₩2,000과 ₩2,700이다. (주)감평의 20x1년도 현금이자지급액은?

① ₩24,900 ② ₩26,300 ③ ₩29,100 ④ ₩30,900 ⑤ ₩35,100

70. 20x1년 초 설립된 (주)감평의 20x3년 말 자본계정은 다음과 같으며, 설립 후 현재까지 자본금 변동은 없었다. 그 동안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어떠한 형태의 배당도 없었으나, 20x3년 말 배당재원의 확보로 20x4년 3월 1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7,500,000의 현금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주)감평이 우선주에 배분할 배당금은?

구분	액면금액	발행주식수	자본금총계	비고
보통주자본금	₩5,000	12,000주	₩60,000,000	배당률 3%
우선주자본금	₩10,000	3,000주	₩30,000,000	배당률 5%, 누적적, 완전참가적

① ₩2,900,000 ② ₩3,900,000 ③ ₩4,500,000 ④ ₩4,740,000 ⑤ ₩4,900,000

71. 단일제품을 생산하는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 %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기의 생산 및 판매 자료가 다음과 같다면, (주)감평의 당기 직접재료매입액과 영업이익은?

○ 재고자산

	기초재고	기말재고
직접재료	₩17,000	₩13,000
재공품	20,000	15,000
제 품	18,000	23,000

○ 기본(기초)원가 ₩85,000
○ 가공(전환)원가 98,000
○ 매 출 액 180,000
○ 판매관리비 10,000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직접재료매입액	영업이익
①	₩46,000	₩15,000	②	₩48,000	₩15,000
③	₩48,000	₩20,000	④	₩52,000	₩20,000
⑤	₩52,000	₩26,000			

72.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주)감평의 20x1년도 연간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600,000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650,000이다. 20x1년도 연간 예정조업도는 20,000시간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은 18,000시간이다. (주)감평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전액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있다. 20x1년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전 매출총이익이 ₩400,000이라면,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총이익은?

① ₩290,000 ② ₩360,000 ③ ₩400,000 ④ ₩450,000 ⑤ ₩510,000

73. (주)감평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제품X, 제품Y, 제품Z를 생산한다. (주)감평은 결합원가를 분리점에서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제품에 배부한다. 결합제품 및 추가가공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X	제품Y	제품Z	합계
생산량	150단위	200단위	100단위	450단위
결합원가	₩15,000	?	?	?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가격	₩200	₩100	₩500	
추가가공원가	₩3,500	₩5,000	₩7,500	₩16,000
추가가공 후 단위당 판매가격	₩220	₩150	₩600	

(주)감평은 각 제품을 분리점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주)감평이 위 결합제품을 전부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최대 매출총이익은? (단, 결합공정 및 추가가공과정에서 재공품 및 공손은 없다.)

① ₩25,000 ② ₩57,000 ③ ₩57,500 ④ ₩82,000 ⑤ ₩120,000

74. (주)감평은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은 (주)감평의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와 작업 #203의 원가동인에 관한 자료이다.

○ 연간 활동제조간접원가 예산자료

활동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원가동인	원가동인수량
생산준비	₩200,000	생산준비시간	1,250시간
재료처리	₩300,000	재료처리횟수	1,000회
기계작업	₩500,000	기계작업시간	50,000시간
품질관리	₩400,000	품질관리횟수	10,000회

○ 작업 #203의 원가동인 자료

작업	생산준비시간	재료처리횟수	기계작업시간	품질관리횟수
#203	60시간	50회	4,500시간	500회

작업 #203의 제조원가가 ₩300,000이라면, 작업 #203의 기본(기초)원가는?

① ₩210,400 ② ₩220,000 ③ ₩225,400 ④ ₩230,400 ⑤ ₩255,400

75.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의 20x1년도와 20x2년도의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	20x2년
생산량	5,000개	10,000개
판매량	4,000개	10,000개
직접재료원가	₩500,000	₩1,000,000
직접노무원가	₩600,000	₩1,200,000
변동제조간접원가	₩400,000	₩800,000
고정제조간접원가	₩200,000	₩250,000
변동판매관리비	₩200,000	₩400,000
고정판매관리비	₩300,000	₩350,000

(주)감평의 20x2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0일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재공품은 없으며 원가흐름은 선입선출법을 가정한다.)

① ₩85,000 ② ₩115,000 ③ ₩120,000 ④ ₩135,000 ⑤ ₩140,000

76.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전부원가계산에서 적용할 수 있으나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ㄴ. 표준원가계산제도는 종합원가계산제도에 적용이 가능하다.
ㄷ. 직접재료원가 가격차이를 구입시점에서 분리하든 사용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동일하다.
ㄹ.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예산차이는 실제투입량 변동예산과 실제산출량 변동예산의 차이를 의미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7. (주)감평은 단일제품 8,000단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이다. (주)감평은 (주)한국으로부터 단위당 ₩450에 1,500단위의 특별주문을 받았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여 단위당 변동원가가 ₩20 증가하게 된다. (주)감평의 연간 최대생산능력이 9,000단위라면, 이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증분손익은?

① 손실 ₩105,000 ② 손실 ₩75,000 ③ 손실 ₩55,000
④ 이익 ₩95,000 ⑤ 이익 ₩195,000

78. (주)감평의 총변동원가가 ₩240,000, 총고정원가가 ₩60,000, 공헌이익률이 40 %이며, 법인세율은 20 %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는 동일하다.)

① 매출액은 ₩400,000이다.
② 안전한계율은 62.5 %이다.
③ 영업레버리지도는 1.2이다.
④ 세후 영업이익은 ₩80,000이다.
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이다.

79. (주)감평은 단위당 판매가격이 ₩300이고, 단위당 변동원가가 ₩180인 단일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주)감평의 최대조업도는 5,000단위이고, 고정원가는 조업도 수준에 따라 변동하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조업도	고정원가
0 ~ 2,000단위	₩300,000
2,001 ~ 4,000단위	450,000
4,001 ~ 5,000단위	540,000

(주)감평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영업이익은?

① ₩12,000 ② ₩15,000 ③ ₩24,000 ④ ₩30,000 ⑤ ₩60,000

80. 20x1년 초 영업을 개시한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의 20x1년 1분기 월별 매출액 예산은 다음과 같다.

	1월	2월	3월
매출액	₩2,220,000	₩2,520,000	₩2,820,000

(주)감평은 매출원가의 20 %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월말재고로 그 다음 달 매출원가의 40 %를 보유하는 재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감평의 매월 상품매입 중 50 %는 현금매입이고, 50 %는 외상매입이다. 외상매입대금 중 80 %는 매입한 달의 1개월 후에, 20 %는 매입한 달의 2개월 후에 지급된다.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주)감평의 20x1년 2월 예상되는 현금지출액은? (단, 매입에누리, 매입환출, 매입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1,076,000 ② ₩1,100,000 ③ ₩1,345,000 ④ ₩2,176,000 ⑤ ₩2,445,000

감정평가사

2019년 1차 2교시 정답과 해설

정답표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①	①	①	③	⑤	⑤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③	④	⑤	③	②	④	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⑤	④	②	③	④	⑤	③	④	①	⑤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⑤	③	④	②	④	⑤	②	②	③	②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④	④	①	②	⑤	③	④	④	①	②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⑤	③	①	②	⑤	④	③	②	⑤	④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④	②	③	②	③	⑤	①	①	②	⑤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③	①	③	①	②	③	④	③	⑤	④

시험지·최종정답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 해설 봄기출

1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정답 ①**

① X 해설 도시 · 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결정한 때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② O 해설 도시 · 군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 군기본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입안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1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O 해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변경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개정] 지금은 1제곱킬로미터 미만 공유수면 등은 시 · 도지사가 결정한다.

④ O 해설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 개량,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1 해설 계속 정답 ①

⑤ O 해설 지형도면을 직접 작성하거나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는 그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2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정답 ④

① O 해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걸친 범위로 정한다 — 여러 시 · 도면 국토교통부장관, 도 하나 안이면 도지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② O 해설 광역도시계획에는 공간 구조 · 녹지관리체계 · 광역시설과 함께 경관계획에 관한 정책 방향이 들어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호).

③ O 해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면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④ X 해설 협의가 안 된 시 · 도지사는 공동으로든 단독으로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신청 의무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⑤ O 해설 광역도시계획협의회가 협의 · 조정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관계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는 이를 따라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3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정답 ②

① X 해설 학교는 공공 · 문화체육시설이다 — 공간시설은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② O 해설 녹지는 광장 · 공원 · 유원지 · 공공공지와 함께 공간시설로 분류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③ X 해설 하천은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와 함께 방재시설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④ X 해설 주차장은 도로 · 철도 · 자동차정류장과 같은 교통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3 해설 계속 정답 ②

⑤ X 해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은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4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정답 ①

① O 해설 건폐율 최대한도는 근린상업지역 70%,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계획관리지역 40%, 자연녹지지역 20% 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② X 해설 계획관리지역(40%)이 자연녹지지역(20%)보다 크므로 ㄱ이 ㄴ보다 앞서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6호 · 제19호).

③ X 해설 근린상업지역(70%)이 가장 크고, 계획관리지역(40%)은 제2종일반주거지역(60%)보다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④ X 해설 제2종일반주거지역(60%)은 근린상업지역(70%)보다 작다 — 상업지역이 맨 앞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4호 · 제9호).

⑤ X 해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 앞에 두고, 자연녹지(20%)를 계획관리(40%) 앞에 둔 두 곳이 어긋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1항).

5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와 실효 정답 ①

① O 해설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안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② X 해설 매수청구 대상은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목으로 정한다 —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위 건축물 · 정착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③ X 해설 관리지역 같은 용도지역은 매수청구의 기준이 아니다 — 지목이 대(垈)여야 청구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④ X 해설 매수청구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다 — 20년은 시설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는 기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⑤ X 해설 기간과 대상이 모두 어긋난다 — 10년 동안 사업이 없을 때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6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정답 ①

① X 해설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 고시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② O 해설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호).

③ O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은 별도 절차 없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④ O 해설 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국토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는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⑤ O 해설 용도지구는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등과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7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건폐율과 용적률 정답 ③

① X 해설 20퍼센트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한도다 — 미지정 지역의 용적률은 80퍼센트까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4호, 제79조 제1항).

② X 해설 50퍼센트는 시행령이 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용적률 범위의 아래 끝이고, 최대한도는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1호).

③ O 해설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을 적용하므로 용적률 최대한도는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4호).

④ X 해설 100퍼센트는 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의 한도다 — 미지정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아 8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⑤ X 해설 125퍼센트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2호 다목) [개정] 지금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 둔다.

8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용도지구 정답 ⑤

① X 해설 방재지구는 풍수해 · 산사태 · 지반 붕괴 같은 재해를 예방하려고 지정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② X 해설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을 예방하려는 지구로, 특정시설의 입지 제한과는 목적이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

③ X 해설 복합용도지구는 거꾸로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꾀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9호).

④ X 해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 상업 · 공업 · 관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하려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7호).

⑤ O 해설 오염물질 배출시설 · 청소년 유해시설처럼 특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지구가 특정용도제한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8호).

9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정답 ⑤

① X 해설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업 배치는 일반공업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제3호 나목).

② X 해설 ㄱ과 ㄴ에 더해, 불가피할 때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는 녹지는 보전녹지가 아니라 자연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다목).

③ X 해설 ㄴ과 ㄷ은 맞지만, 중고층주택 중심 지역은 제2종(중층주택)이 아니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④ X 해설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 · 경관 · 산림을 보전하는 곳이고, 도시확산 방지와 장래 도시용지 공급용은 자연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4호 가목).

⑤ O 해설 중고층주택 중심은 제3종일반주거, 무공해 공업은 일반공업, 장래 도시용지로 보전하는 녹지는 자연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10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공동구 정답 ①

① X 해설 택지개발지구 등은 200만 제곱미터를 넘어야 사업시행자에게 공동구 설치 의무가 생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② O 해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시 세우는 주기는 5년이고, 1년 1회 이상은 안전점검 주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제3항).

③ O 해설 공동구 관리비용은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내되, 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해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④ O 해설 설치비용을 내지 않았거나 덜 낸 자가 공동구를 점용 · 사용하려면 공동구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2항).

⑤ O 해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 · 보수 등을 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3항).

11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정답 ③

① X 해설 어촌 · 어항법의 어항구역 중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ㄷ)도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② X 해설 관리지역의 보전산지(ㄹ)는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의제된다 — 도시지역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③ O 해설 택지개발지구 · 국가산업단지 · 도시지역에 연접한 어항구역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보전산지는 농림지역 등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④ X 해설 국가 · 일반 · 도시첨단산업단지(ㄴ)도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데 빠졌고, 보전산지(ㄹ)가 잘못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

⑤ X 해설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ㄱ)가 빠지고, 농림지역 등으로 의제되는 보전산지(ㄹ)가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

12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구역 안의 행위제한 정답 ③

① O 해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4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② O 해설 다세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이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③ X 해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것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나목).

④ O 해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조례 없이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다목).

⑤ O 해설 노유자시설도 단독주택 · 유치원 등과 함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바로 지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

13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정답 ①

① O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는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② X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③ X 해설 행정청이 허가받았다면 새 시설은 관리청 몫, 없어지는 종래 시설은 그 행정청 몫이 되고 둘 다 대가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④ X 해설 귀속 사항이 든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⑤ X 해설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14 감정평가관계법규 ·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법인 정답 ③

① X 해설 주사무소 · 분사무소에는 각각 2명 이상만 두면 되므로 3명씩이면 기준을 넘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14 해설 계속 정답 ③

② X 해설 감정평가법인은 해산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 인가 대상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③ O 해설 합병은 사원 전원의 동의나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7항).

④ X 해설 자본금 2억원 미달은 해산 사유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증여나 증자로 메워야 하는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2항).

⑤ X 해설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감정평가법인은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정지 가중이 아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15 감정평가관계법규 · 감정평가법 · 업무와 자격·시험·등록 정답 ④

① O 해설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6호).

② O 해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부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③ O 해설 한 감정평가사가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사무소에 함께 소속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④ X 해설 실무수습은 1년이지만 1차 시험을 면제받고 합격한 사람은 1주일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5조) [개정] 지금은 4주다.

⑤ O 해설 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자격이 생기고, 실무수습은 업무를 하려고 등록할 때 필요한 요건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7조 제1항).

16 감정평가관계법규 · 감정평가법 · 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정답 ⑤

① X 해설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개정] 지금은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② X 해설 감정평가서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관련 서류는 2년 보존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16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감정평가업자는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④ X 해설 수수료 요율과 실비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 ·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⑤ O 해설 업자가 보존하는 기간과 해산 · 폐업 때 장관이 넘겨받아 보관하는 기간은 모두 원본 5년, 관련 서류 2년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행령 제6조 제2항).

17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공시법 · 개별공시지가 정답 ③

① O 해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 ·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O 해설 틀린 계산 · 오기 · 표준지 선정의 착오 같은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③ X 해설 택지 출입 때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는 공시업무를 의뢰받은 자에게만 필요하고 관계 공무원은 받지 않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④ O 해설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점유자의 승인 없이 택지나 담장 ·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⑤ O 해설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비용은 그 50퍼센트 이내에서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24조).

18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공시법 · 공동주택가격 정답 ②

① O 해설 공동주택가격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감정원에 맡겨 조사 · 산정하게 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개정]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이 맡는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6항).

② X 해설 1월 1일~5월 31일에 대지가 합병되면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그 해 9월 30일까지 공시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호).

③ O 해설 공시기준일 뒤 건축법상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은 공시기준일을 달리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18 해설 계속 정답 ②

④ O 해설 공동주택가격 공시에는 소재지 · 명칭 · 동 · 호수와 가격 외에 공동주택의 면적도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3호).

⑤ O 해설 아파트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따로 결정 · 고시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1호).

19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공시법 · 표준지공시지가 정답 ④

① X 해설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다 — 평(3.3제곱미터)이 아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② X 해설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다 — 부과대상이면 공시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③ X 해설 지가정보 제공 · 토지거래 지표 · 감정평가 기준이 되는 효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

④ O 해설 표준지에 지상권 등 사용 ·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⑤ X 해설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에는 지번 · 가격 · 면적 · 이용상황 외에 지목 · 용도지역 · 도로 상황이 들어간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20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정답 ①

① X 해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돼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지만, 판결로 취득할 때는 이 제한이 없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② O 해설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외에 선박, 지상권 · 광업권 같은 권리, 특허권 ·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도 들어간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③ O 해설 총괄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계획 작성지침을 알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6월 30일까지 계획을 낸다(국유재산법 제9조 제1항 · 제2항).

④ O 해설 보존용재산은 행정재산의 한 종류이고,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바꾸어 관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제4호, 제8조 제2항).

20 해설 계속 정답 ①

⑤ O 해설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지만, 다른 법률이나 확정판결에 따르면 일반재산에 설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1호).

21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정답 ⑤

① O 해설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 새 허가 없이 계속 쓰는 자도 무단점유자로 본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② O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74조).

③ O 해설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무단점유자는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범위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제1호).

④ O 해설 사용료 · 변상금 등의 연체료는 납기일부터 60개월을 넘는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유재산법 제73조 제1항).

⑤ X 해설 무단점유자에게 물리는 변상금은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이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22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총괄청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정답 ④

① O 해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1조 제1항).

② O 해설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

③ O 해설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국유재산은 총괄청이 그 장을 지정한다(국유재산법 제24조).

④ X 해설 국유재산책임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총괄청 권한이 아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의2 제1항).

⑤ O 해설 총괄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4 제1항).

23 감정평가관계법규 · 국유재산법 · 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정답 ②

① O 해설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하지만 일반재산은 대부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② X 해설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59조의2 제1항 제1호).

③ O 해설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그 기업체의 지분증권을 팔 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9호).

④ O 해설 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 · 경영구조를 개편하려고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60조 제3호).

⑤ O 해설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을 교환할 때 쌍방 가격이 다르면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해야 한다(국유재산법 제54조 제3항).

24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결합건축 정답 ③

① X 해설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 · 도지사와 함께 지정신청기관이다(건축법 제71조 제1항).

② X 해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 금지 지역이 아니다 —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3항).

③ O 해설 시 · 도지사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건축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나목,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4호).

④ X 해설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도로공사 등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없다(건축법 제70조 제2호, 시행령 제106조 제1항).

⑤ X 해설 지정 뒤 도시 · 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바뀌면 지정신청기관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71조 제7항, 시행령 제107조 제4항 제2호).

25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건축허가와 사전결정 정답 ④

① O 해설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광역시에 지으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25 해설 계속 정답 ④

② O 해설 도지사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 · 공고한 구역의 3층 이상 숙박시설은 시장 · 군수가 허가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③ O 해설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의 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9호).

④ X 해설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13조의2 제1항,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⑤ O 해설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은 신고로 허가를 대신한다 — 3층 이상이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여야 한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26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면적·높이 산정과 높이 제한 정답 ⑤

① O 해설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할 때는 도시 · 군관리계획 같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1호).

② O 해설 가로구역이 접한 도로가 넓은지 좁은지도 높이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③ O 해설 상 · 하수도 같은 간선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가로구역의 높이를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3호).

④ O 해설 도시미관과 경관계획도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⑤ X 해설 다섯째 고려 사항은 해당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이고, 에너지 관련 계획은 들어 있지 않다(건축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5호).

27 감정평가관계법규 · 건축법 ·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정답 ③

① X 해설 주거용 대지의 컨테이너 간이창고(ㄹ)는 적용 제외가 아니고, 플랫폼 · 통행료 징수시설 · 수문조작실이 빠졌다(건축법 제3조 제1항).

② X 해설 지정문화재(ㄱ)와 하천구역의 수문조작실(ㅁ)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인데 빠졌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제5호).

27 해설 계속 **정답 ③**

③ O 해설 적용 제외되는 컨테이너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로만 쓰는 건축물의 대지에 둔 것뿐이라 주거용 대지의 것(ㄹ)은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④ X 해설 철도 선로 부지의 플랫폼(ㄴ)은 적용 제외인데 빠졌고, 주거용 대지의 컨테이너 창고(ㄹ)는 적용 제외가 아니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

⑤ X 해설 문화재보호법의 지정문화재 · 가지정 문화재(ㄱ)가 빠지고 ㄹ이 잘못 들어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 지금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지정문화유산 등이다.

28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지목 **정답 ④**

① O 해설 물건을 보관 · 저장하려고 독립적으로 설치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3호).

② O 해설 제조업을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법이 정한 28개 지목에 들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9호 가목).

③ O 해설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취수 · 저수 · 정수 · 배수 시설의 부지는 수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1호).

④ X 해설 주택용지라는 지목은 없다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대(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시행령 제58조 제8호 가목).

⑤ O 해설 궤도 설비를 갖춰 이용하는 토지와 역사 · 차고 같은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5호).

29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정답 ①**

① X 해설 전산으로 기록한 지적공부가 멸실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복구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② O 해설 멸실 · 훼손에 대비해 지적공부를 복제해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

③ O 해설 전산으로 기록한 지적공부는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2항).

29 해설 계속 **정답 ①**

④ O 해설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 · 활용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⑤ O 해설 지적전산자료 신청 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면제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30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정답 ⑤**

① O 해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 지번 · 대지권 비율 · 소유자 등을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1호).

② O 해설 지번은 토지대장뿐 아니라 대지권등록부에도 등록하는 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2호).

③ O 해설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는 그 대지권 비율을 대지권등록부에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3호).

④ O 해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민등록번호도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항 제4호).

⑤ X 해설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은 토지대장 ·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 제6호).

31 감정평가관계법규 · 공간정보관리법 · 경계와 면적 **정답 ⑤**

① O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을 기본으로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1호).

② O 해설 지번도 등록하고,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등록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2호).

③ O 해설 경계점 위치 설명도는 법률이 직접 정한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제4호).

④ O 해설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와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더한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제2호).

31 해설 계속 정답 ⑤

⑤ X 해설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경계점에 관한 사항만 적고 토지소유자의 성명은 등록하지 않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32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이의신청 정답 ③

① O 해설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② O 해설 이의신청은 법원에 바로 내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법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개정] 지금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보낼 수도 있다.

③ X 해설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은 가등기나 이의 부기등기를 명해 권리관계를 보전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④ O 해설 이의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8조).

⑤ O 해설 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2항).

33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정답 ④

① X 해설 수용 등기는 등기의무자와 함께 낼 필요가 없다 —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② X 해설 수용 등기 때 소유권 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신청이 필요 없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③ X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해 권리이전등기를 할 때도 수용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5항).

④ O 해설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직권 말소에서 빠진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⑤ X 해설 등기권리자는 수용 등기를 신청하면서 포괄승계인을 갈음해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2항).

34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정답 ②

① X 해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두 가지로만 나뉜다 — 집합건물등기부라는 구분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② O 해설 등기부와 폐쇄한 등기기록은 보존기간 없이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2항, 제20조 제2항).

③ X 해설 영장 압수 예외는 신청서 등 부속서류에 관한 것이고, 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 관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3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0조 제1항).

④ X 해설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2항).

⑤ X 해설 1필 토지나 1개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두되, 구분건물은 1동 전체에 1개 등기기록을 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35 감정평가관계법규 · 부동산등기법 ·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의 효력·순위 정답 ④

① O 해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여덟 가지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② O 해설 다른 토지의 편익을 위해 쓰는 지역권은 등기할 수 있는 용익권이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3호).

③ O 해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호, 민법 제348조).

④ X 해설 유치권은 점유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 있지 않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⑤ O 해설 채권담보권도 권리질권과 함께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열거되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7호).

36 감정평가관계법규 · 동산채권담보법 · 동산담보권 정답 ⑤

① X 해설 무기명채권증서뿐 아니라 증권이 작성된 동산, 등기된 선박, 유동화증권도 모두 목적물에서 빠진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② X 해설 무기명채권증서(ㄱ)와 유동화증권(ㄹ)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이라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36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ㄷ)도 다른 법률로 등기되는 것이라 동산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④ X 해설 화물상환증 · 선하증권 · 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ㄴ)도 목적물에서 빠지므로 넷 모두 해당한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2호).

⑤ O 해설 등기된 선박, 증권이 작성된 동산, 무기명채권증서 · 유동화증권은 모두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2조).

37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답 ②**

① X 해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총회 의결 없이 당연 퇴임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2항).

② O 해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소집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③ X 해설 조합장 · 이사와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감사가 조합의 대표권을 가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④ X 해설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에서 정관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4항).

⑤ X 해설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할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

38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답 ②**

① O 해설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② X 해설 계획기간을 줄이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돼 주민공람 · 지방의회 의견청취 없이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2호).

38 해설 계속 **정답 ②**

③ O 해설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기본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제12호).

④ O 해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2항).

⑤ O 해설 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1항 · 제2항).

39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정답 ③**

① O 해설 건축물 최고 높이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8호).

② O 해설 지정권자는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연접한 구역을 통합해 지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③ X 해설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예상돼 직권해제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④ O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 · 확대하고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1호).

⑤ O 해설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면 정비계획으로 바뀐 용도지역 · 정비기반시설 등은 지정 전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 제1항).

40 감정평가관계법규 ·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시행자 **정답 ②**

① O 해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 군수등 ·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② X 해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③ O 해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을 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3호).

40 해설 계속 정답 ②

④ O 해설 재개발사업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2항).

⑤ O 해설 시장 · 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2항).

41 회계학 · 재무회계 · 투자부동산 정답 ④

① O 해설 건설·개발 중이라도 완성 뒤 임대나 시세차익에 쓸 부동산이면 처음부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② O 해설 투자부동산은 처음에 원가로 재며, 취득에 직접 든 법률보수·취득세 같은 거래원가도 원가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③ O 해설 팔려고 보유하거나 팔려고 짓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이다 —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보유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④ X 해설 개발 없이 팔기로 해도 제거될 때까지 투자부동산으로 두며 재고자산으로 바꾸지 않는다 — 재고자산 대체는 판매 목적 개발을 시작할 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⑤ O 해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손익을 그 기간 당기손익에 넣는다 —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42 회계학 · 재무회계 · 교환에 의한 취득 정답 ④

① X 해설 A는 내준 자산 공정가치 950,000만 적고 함께 준 현금 200,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 지급한 현금은 취득원가에 더한다.

② X 해설 A는 함께 준 현금 200,000이 빠졌고, B는 (주)한국이 받은 현금을 처분대가에 두 번 넣은 금액이다 (1,350,000−900,000).

③ X 해설 A는 내준 자산 공정가치 950,000에 현금 200,000을 더한 1,150,000이어야 하고, B 450,000은 받은 현금을 대가에 한 번 더 얹은 금액이다.

④ O 해설 (주)감평 취득원가 = 내준 자산 공정가치 950,000 + 지급 현금 200,000 = 1,150,000. (주)한국 처분이익 = 받은 대가 1,150,000(자산 950,000 + 현금 200,000) − 장부금액 900,000(1,500,000 − 600,000) = 250,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42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A는 맞지만 B는 (주)한국이 내준 자산 공정가치 1,150,000에 받은 현금 200,000을 또 더해 (1,350,000−900,000) 나온 금액이다 — 현금은 그 공정가치 안에 들어 있다.

43 회계학 · 재무회계 · 재평가모형 정답 ①

① O 해설 재평가잉여금 = 공정가치 100,000 − 장부금액 80,000(100,000 − 1년 상각 100,000÷5) = 20,000 — 재평가 전에 그해 감가상각부터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② X 해설 30,000이 되려면 장부금액이 70,000이어야 하는데, 5년 정액법의 1년 상각은 20,000이라 장부금액은 80,000이다.

③ X 해설 상각을 2년치 40,000 빼서 장부금액을 60,000으로 보면 나오는 금액이다 — 20x1년 말 평가라 1년치만 뺀다.

④ X 해설 50,000이 되려면 장부금액이 취득원가의 절반이어야 한다 — 잔존가치 0, 5년 정액법이면 해마다 20,000씩만 줄어든다.

⑤ X 해설 재평가잉여금은 공정가치가 그해 말 장부금액을 넘는 만큼만 잡는다 — 100,000과 80,000의 차이 20,000뿐이다.

44 회계학 · 재무회계 · 유형자산의 손상 정답 ②

① X 해설 손상 뒤에는 회수가능액 2,232,000을 남은 4년으로 나눠 상각한다 — 그래야 20x2년 말 장부금액이 1,674,000이 된다.

② O 해설 20x1년 말 장부 4,800,000을 회수가능액 2,232,000으로 낮추고 20x2년 상각 558,000(2,232,000÷4) 뒤 장부 1,674,000. 환입 한도는 손상이 없었을 때의 장부 3,600,000(6,000,000−2,400,000)이라 환입액 = 3,600,000 − 1,674,000 = 1,926,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③ X 해설 환입액은 한도인 「손상이 없었다면 남았을 장부금액」 3,600,000에서 20x2년 말 장부금액 1,674,000을 뺀 값이고, 당기이익으로 잡는다.

④ X 해설 회수가능액 4,000,000까지 올려(4,000,000−1,674,000) 나온 금액이다 — 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 남았을 장부금액 3,600,000을 넘지 못한다.

44 해설 계속 정답 ②

⑤ X 해설 20x1년에 잡은 손상차손 2,568,000(4,800,000−2,232,000)을 통째로 되돌린 금액이다 — 그사이 상각이 진행돼 한도까지만 환입한다.

45 회계학 · 재무회계 · 무형자산 정답 ⑤

① X 해설 ㄱ(비한정 무형자산은 징후가 없어도 해마다 손상검사)과 ㄷ(브랜드 등의 후속지출은 비용)이 틀렸고, 옳은 ㄹ·ㅁ이 빠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② X 해설 ㄱ·ㄷ이 끼었다 — 특히 브랜드·고객목록 등에 대한 후속지출은 사업 전체를 키우는 지출과 나눌 수 없어 발생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③ X 해설 ㄱ이 틀렸고 ㄴ이 빠졌다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는 대신 징후와 상관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④ X 해설 ㄷ이 틀렸고 ㄹ이 빠졌다 — 브랜드 등의 후속지출은 원가가 아니라 비용이고, 잔존가치 변동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⑤ O 해설 ㄴ(연구·개발 구분이 안 되면 모두 연구단계)·ㄹ(잔존가치는 해마다 검토, 변동은 추정 변경)·ㅁ(처분하거나 효익이 없을 때 제거)이 옳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46 회계학 · 재무회계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수취채권 정답 ③

① X 해설 할인율 8%면 할인료가 103,000(5,150,000×8%×3/12)이라 받는 돈이 5,047,000이 된다 — 할인료는 액면이 아니라 만기금액에 곱한다.

② X 해설 10%면 할인료 128,750, 받는 돈 5,021,250이다 — 은행은 만기에 받을 원리금 5,150,000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만큼 할인한다.

③ O 해설 만기금액 = 5,000,000 × (1 + 6% × 6/12) = 5,150,000, 할인료 = 5,150,000 − 4,995,500 = 154,500. 남은 3개월로 154,500 = 5,150,000 × 할인율 × 3/12 → 할인율 = 154,500 ÷ 1,287,500 = 12%.

④ X 해설 14%면 할인료가 180,250이라 받는 돈이 4,969,750으로 4,995,500보다 적다 — 할인기간은 보유한 3개월을 뺀 남은 3개월이다.

46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X 해설 16%면 받는 돈이 4,944,000(5,150,000−206,000)이다 — 할인료 154,500을 만기금액과 남은 3개월로 나누면 12%가 나온다.

47 회계학 · 재무회계 · 유형자산의 인식과 취득원가 정답 ④

① X 해설 ㄱ 영업 재배치 원가는 자산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가가 아니라 비용이고, ㅁ 설치장소 준비원가가 빠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② X 해설 ㄱ(재배치 원가)과 ㄹ(새 상품 소개 원가)은 자산 취득과 관계없는 영업비용이라 둘 다 취득원가에서 빠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③ X 해설 ㄹ 새 상품·용역 소개 원가는 광고·판촉 활동 원가라 비용이다 — 대신 ㅁ 설치장소 준비원가가 취득원가에 들어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④ O 해설 직접 관련 종업원 급여(ㄴ)·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세금(ㄷ)·설치장소 준비원가(ㅁ)는 자산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원가라 취득원가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⑤ X 해설 ㄹ이 끼고 ㄴ이 빠졌다 — 매입·건설에 직접 관련되어 생긴 종업원 급여는 취득원가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48 회계학 · 재무회계 · 유형자산의 손상 정답 ④

① X 해설 4,000이 되려면 회수가능액이 26,000이어야 한다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22,000과 사용가치 23,000 중 큰 23,000이다.

② X 해설 처분부대원가 3,000을 빼지 않은 공정가치 25,000을 회수가능액으로 본 금액이다(30,000−25,000) — 순공정가치는 22,000이다.

③ X 해설 6,000이 되려면 장부금액이 29,000이어야 한다 — 연수합계법 첫해 상각은 50,000의 4/10인 20,000이라 장부금액은 30,000이다.

④ O 해설 20x1년 상각 = 50,000 × 4/10(연수합계 1+2+3+4) = 20,000, 장부 30,000. 회수가능액 = 순공정가치 22,000(25,000−3,000)과 사용가치 23,000 중 큰 23,000. 손상차손 = 30,000 − 23,000 = 7,000(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⑤ X 해설 회수가능액을 둘 중 작은 순공정가치 22,000으로 본 금액이다(30,000−22,000) — 회수가능액은 둘 중 큰 금액이다.

49 회계학 · 재무회계 · 유형자산의 인식과 취득원가 정답 ①

① O 해설 일괄취득 원가는 공정가치 비율로 나눈다 — 기계장치 = 20,000,000 × 2/(7+1+2) = 4,000,000. 판매회사 장부금액은 배분 기준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② X 해설 5,000,000은 일괄취득가의 4분의 1이다 — 기계장치 몫은 공정가치 비율 2/10, 곧 5분의 1이다.

③ X 해설 6,000,000은 비율 3/10에 해당한다 — 7:1:2로 나누면 토지 14,000,000·건물 2,000,000·기계장치 4,000,000이다.

④ X 해설 7,000,000은 일괄취득가의 35%로 어느 자산의 공정가치 비율과도 맞지 않는다 — 기계장치는 20%다.

⑤ X 해설 판매회사 장부금액 비율(10,000,000/25,000,000)로 나눈 금액이다 — 배분 기준은 판 사람의 장부가 아니라 공정가치다.

50 회계학 · 재무회계 · 거래형태별 수익인식 정답 ②

① X 해설 B는 적송운임 8,000을 적송품 원가에 넣지 않고 140,000×60%만 한 금액이다 — 운임은 팔린 비율만큼 매출원가가 된다.

② O 해설 수탁자 (주)대한의 수익은 수수료뿐이다: 60단위 × 2,000 × 5% = 6,000. (주)감평 매출원가 = (적송품 원가 140,000 + 적송운임 8,000) × 60% = 88,800 — 운임은 적송품 원가에 넣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2호).

③ X 해설 수탁자 수익은 판매대금 120,000의 5%인 6,000이고, B는 적송운임을 빠뜨린 84,000이라 둘 다 어긋난다.

④ X 해설 B는 맞지만 수탁자 수익은 판매대금 120,000(60단위×2,000)에 수수료율 5%를 곱한 6,000이다 — 판매대금 자체는 수탁자 수익이 아니다.

⑤ X 해설 8,000은 (주)감평이 운송업체에 준 운임과 같은 금액일 뿐 수탁자 수익이 아니고, B도 그 운임을 원가에서 빠뜨렸다.

51 회계학 · 재무회계 · 건설계약 정답 ⑤

① X 해설 진행률을 20x2년 원가만으로 40%(4,000/10,000)로 보면 누적이익 800에서 500을 빼 300이 나온다 — 진행률은 누적원가로 잰다.

51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설계변경 뒤에는 바뀐 계약금액 12,000과 새 추정 총원가 10,000으로 누적이익을 다시 계산하고, 앞 해에 잡은 이익 500만 뺀다.

③ X 해설 500은 20x1년 이익((10,000−8,000)×25%)이다 — 20x2년 몫은 누적이익 1,200에서 이것을 뺀 금액이다.

④ X 해설 수익으로 풀어도 같다 — 20x2년 수익 4,700(누적 7,200 − 앞 해 2,500)에서 당기 원가 4,000을 빼면 700이다.

⑤ O 해설 20x2년 진행률 = 누적원가 6,000 ÷ 추정 총원가 10,000 = 60%. 누적이익 = (12,000 − 10,000) × 60% = 1,200, 20x1년 이익 = (10,000 − 8,000) × 25% = 500이라 20x2년 이익 = 1,200 − 500 = 700(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52 회계학 · 재무회계 · 법인세회계 정답 ③

① X 해설 세전이익 150,000에 25%만 곱한 금액이다 — 접대비 한도초과 24,000은 영구적 차이라 법인세비용을 6,000 늘린다.

② X 해설 40,500이 되려면 기준 이익이 162,000이어야 한다 — 회계이익에 영구적 차이만 더한 174,000에 25%를 곱해야 한다.

③ O 해설 당기법인세 = (150,000 + 접대비 24,000 + 감가상각비 10,000) × 25% = 46,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는 일시적 차이라 이연법인세자산이 2,500(10,000×25%) 늘어 법인세비용 = 46,000 − 2,500 = 43,500(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④ X 해설 미래에 이익이 계속 나서 이연법인세자산을 다 인정하므로, 그 증가분 2,500만큼 법인세비용이 당기법인세 46,000보다 적다.

⑤ X 해설 이연법인세자산 증가 2,500을 당기법인세 46,000에 더한 금액이다 — 이연법인세자산이 늘면 법인세비용은 줄어든다.

53 회계학 · 재무회계 · 리스 정답 ①

① O 해설 리스료만 줄어든 변경은 남은 리스료를 변경일의 수정 할인율(증분차입이자율 8%)로 다시 할인한다: 70,000 × 1.7833(8%, 2기간) = 124,831(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53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최초 할인율 6%의 2기간 연금계수 1.8334를 쓴 금액(70,000×1.8334)이다 — 리스변경 때는 변경일의 할인율로 바꾼다.

③ X 해설 변경 직전 리스부채(약 165,005)와 새 현재가치 124,831의 차이는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하고, 리스부채는 새 현재가치로 둔다.

④ X 해설 남은 2년이 아니라 4년치 리스료를 8%로 할인(70,000×3.3121)한 금액이다 — 이미 2년이 지났다.

⑤ X 해설 6% 4기간 연금계수 3.4651을 70,000에 곱한 금액이다 — 남은 기간 2년과 변경일 할인율 8%를 써야 한다.

54 회계학 · 재무회계 ·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정답 ②

① X 해설 20x1년 선급비용 3,000을 빼서 나온 금액이다 — 이 해에 비용으로 처리한 선급분은 비용을 되돌려 이익에 더한다.

② O 해설 기초재고 과소 12,000은 20x1년 이익을 부풀려 −12,000, 기말재고 과대 −5,000, 20x0년 선급비용 4,000은 20x1년 비용이라 −4,000, 20x1년 선급비용 +3,000: 500,000 − 12,000 − 5,000 − 4,000 + 3,000 = 482,000.

③ X 해설 20x0년 선급비용 4,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 앞 해에 비용 처리한 선급분은 실제로 20x1년 비용이라 이익에서 뺀다.

④ X 해설 기말재고 오류는 다음 해 이익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 20x0년 말 과소 12,000은 20x1년 매출원가를 줄여 이익을 12,000 부풀렸다.

⑤ X 해설 20x1년 기말재고 과대 5,000을 이익에 더한 금액이다 — 기말재고가 크면 매출원가가 작아져 이익이 부풀려졌으니 뺀다.

55 회계학 · 재무회계 · 재무제표 표시 정답 ⑤

① X 해설 감자차익(ㄱ)과 주식선택권(ㄴ)은 주주와의 자본거래라 포괄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 —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② X 해설 ㅁ 해외사업장 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이지만 ㄱ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바로 가는 자본거래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55 해설 계속 정답 ⑤

③ X 해설 ㄷ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이지만 ㄴ 주식선택권은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잡고 그 상대를 자본조정에 두는 항목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④ X 해설 이익준비금(ㄹ)은 이익잉여금 안에서 적립만 한 것이고 주식선택권(ㄴ)은 자본조정이라 둘 다 기타포괄손익이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⑤ O 해설 당기순손익과 총포괄손익의 차이가 기타포괄손익이다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ㄷ)와 해외사업장 환산손익(ㅁ)이 여기에 든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56 회계학 · 재무회계 · 보고기간후사건·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특수관계자 공시 정답 ④

① X 해설 지급보증 약정(ㄱ)과 공장 화재(ㄴ)는 보고기간말 뒤에 새로 생긴 상황이라 재무제표 금액을 고치지 않는 사건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② X 해설 ㄷ 소송 확정판결은 수정 사건이지만 ㄱ 지급보증 약정은 보고기간 후 새로 맺은 계약이라 고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③ X 해설 ㄹ 상여금 확정은 수정 사건이지만 ㄴ 화재는 보고기간말에 없던 상황이 뒤에 생긴 것이라 고치지 않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④ O 해설 보고기간말에 이미 있던 소송(ㄷ)과 상여금 지급의무(ㄹ)의 금액이 그 뒤 확정된 것이라 재무제표를 고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⑤ X 해설 화재(ㄴ)가 끼었다 — 보고기간 후 생긴 손실은 재무제표 금액을 고치지 않고, 중요하면 주석으로만 알린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57 회계학 · 재무회계 · 사업결합과 영업권 정답 ③

① X 해설 9,000,000은 (주)대한의 장부상 순자산(20,000,000−11,000,000)이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공정가치 순자산을 넘는 금액이다.

② X 해설 부채를 빼지 않고 자산 장부총액 20,000,000을 그대로 이전대가에서 뺀 금액이다(30,000,000−20,000,000).

③ O 해설 순자산 공정가치 = 자산 20,000,000 + 토지 평가차익 8,000,000(18,000,000 − 10,000,000) − 부채 11,000,000 = 17,000,000. 영업권 = 이전대가 30,000,000 − 17,000,000 = 13,000,000(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57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X 해설 장부상 순자산 9,000,000을 그대로 빼 토지 평가차익 8,000,000을 빠뜨린 금액이다(30,000,000−9,000,000).

⑤ X 해설 23,000,000이 되려면 순자산이 7,000,000이어야 한다 — 토지만 공정가치 18,000,000으로 바꿔 넣고 다른 자산 10,000,000도 그대로 더한다.

58 회계학 · 재무회계 · 개념체계 —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측정(공정가치)과 자본유지 정답 ②

① O 해설 여러 측정기준 가운데 기업이 가장 널리 쓰는 것은 역사적 원가이고, 다른 측정기준과 섞어 쓰기도 한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② X 해설 합리적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며 그 자체로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③ O 해설 현행원가로 잰 부채는 지금 그 의무를 갚는 데 드는 현금을 할인하지 않은 금액이다 — 할인한 금액은 현재가치 기준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④ O 해설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써서 얻을 기업 고유의 현금흐름 현재가치라 시장참여자 관점의 공정가치와 다를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⑤ O 해설 측정은 재무제표에 올릴 금액을 정하는 일이고, 그 안에 여러 측정기준 가운데 무엇을 쓸지 고르는 일이 들어 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59 회계학 · 재무회계 · 개념체계 —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측정(공정가치)과 자본유지 정답 ⑤

① X 해설 부채는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이행은 미래에 자원이 빠져나가며 이루어진다 — 미래 의무를 지금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② X 해설 자산 인식에는 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과 원가·가치를 믿을 만하게 잴 수 있을 것,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③ X 해설 비용은 자산이 줄거나 부채가 늘어 미래경제적효익이 감소할 때 인식한다 — 자산 증가·부채 감소는 수익 쪽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④ X 해설 감가상각비는 수익과의 관련이 간접적이라 여러 기간에 체계적·합리적으로 배분해 인식한다 — 매출원가처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59 해설 계속 정답 ⑤

⑤ O 해설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완벽히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라, 서술과 절차의 선택·적용에 오류나 누락이 없다는 뜻이다(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60 회계학 · 재무회계 · 사채의 상환 정답 ④

① X 해설 상환손실 32,000을 장부금액에서 뺀 금액이다(972,872+30,000−32,000) — 손실은 장부금액보다 더 많이 갚았다는 뜻이다.

② X 해설 20x1년 말 장부금액 964,300에 상환손실만 더한 금액이다 — 6개월치 상각 8,572와 경과이자 30,000이 빠졌다.

③ X 해설 경과이자 30,000을 빠뜨린 금액이다(972,872+32,000) — 발문은 경과이자를 포함한 상환금액을 묻는다.

④ O 해설 발행가 = 60,000×2.5771 + 1,000,000×0.7938 = 948,426. 20x1년 말 장부 = 948,426 + (75,874 − 60,000) = 964,300. 6개월 유효이자 38,572 중 상각 8,572 → 상환일 장부 972,872. 상환금액 = 972,872 + 경과이자 30,000 + 손실 32,000 = 1,034,872.

⑤ X 해설 경과이자는 표시이자 6개월분 30,000(1,000,000×6%×6/12)이다 — 유효이자나 1년치 이자를 더하면 상환금액이 부풀려진다.

61 회계학 · 재무회계 · 복합금융상품 정답 ④

① X 해설 할증상환이면 상환할증금 32,464까지 10%로 할인해 부채요소에 넣으므로 전환권대가가 줄어든다 — A 49,743, B 25,353이다.

② X 해설 A·B 모두 보장수익률 8%로 할인한 값이다 — 부채요소는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10%로 할인한다.

③ X 해설 B는 맞지만 A는 8%로 할인한 값이다 — 액면상환이든 할증상환이든 할인율은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다.

④ O 해설 A: 부채요소 = 30,000×2.4869 + 500,000×0.7513 = 450,257 → 500,000 − 450,257 = 49,743. B: 부채요소 = 30,000×2.4869 + 532,464×0.7513 = 474,647 → 500,000 − 474,647 = 25,353(일반사채 시장이자율 10%로 할인).

61 해설 계속 정답 ④

⑤ X 해설 A는 맞지만 B는 보장수익률 8%로 할인한 값이다 — 8%로 할인하면 할증금이 수익률을 8%로 맞춰 줘 전환권대가가 거의 0이 된다.

62 회계학 · 재무회계 · 채무상품과 손상·재분류 정답 ②

① X 해설 단기매매가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 때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겠다고 고를 수 있다 — 한 번 고르면 취소하지 못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② O 해설 회계불일치가 없으면 금융자산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두 가지를 함께 보고 세 범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③ X 해설 회수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총장부금액을 직접 줄인다(제각) — 제각도 제거의 한 형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④ X 해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도 손상차손과 그 환입은 모두 당기손익이다 — 손실충당금은 장부금액을 줄이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⑤ X 해설 상각후원가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옮기면 재분류일 공정가치로 재고, 그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63 회계학 · 재무회계 ·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정답 ③

① X 해설 인상취소 150,000은 매가인상에서 빼고(순인상 240,000) 매가인하 110,000은 판매가에서 뺀다 — 그래야 판매가능 매가가 1,885,000이다.

② X 해설 평균원가법은 기초재고도 원가율 계산에 넣는다 — 원가 1,281,800(143,000+1,138,800)을 판매가 1,885,000으로 나눈 68%를 쓴다.

③ O 해설 판매가능 매가 = 169,000 + 1,586,000 + 순인상 240,000(390,000−150,000) − 순인하 110,000 = 1,885,000, 원가율 = 1,281,800 ÷ 1,885,000 = 68%. 기말 매가 = 1,885,000 − 1,430,000 = 455,000 → 기말재고 = 455,000 × 68% = 309,400.

④ X 해설 455,000은 기말재고를 판매가로 적은 금액이다 — 원가율 68%를 곱해 원가로 바꿔야 한다.

63 해설 계속 정답 ③

⑤ X 해설 485,400은 기말 매가 455,000보다 크다 — 원가율이 1보다 작으니 기말재고 원가는 판매가 455,000보다 작아야 한다.

64 회계학 · 재무회계 · 소매재고법과 매출총이익률법 정답 ②

① X 해설 500,000이 되려면 매출원가가 7,500,000, 곧 매출총이익률이 25%여야 한다 — 이익률 30%면 매출원가는 7,000,000이다.

② O 해설 매출원가 = 순매출액 10,000,000 × (1 − 30%) = 7,000,000. 판매가능원가 = 기초 2,000,000 + 순매입 6,000,000 = 8,000,000. 기말재고 = 8,000,000 − 7,000,000 = 1,000,000.

③ X 해설 3,000,000은 매출총이익(10,000,000×30%)이다 — 기말재고는 판매가능원가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④ X 해설 매출총이익 3,000,000을 매출원가로 보고 판매가능원가 8,000,000에서 뺀 금액이다 — 매출원가는 매출의 70%다.

⑤ X 해설 7,000,000은 매출원가다 — 판매가능원가 8,000,000에서 팔린 7,000,000을 빼고 남은 것이 기말재고다.

65 회계학 · 재무회계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수취채권 정답 ③

① X 해설 A는 과다기장 720,000을 거꾸로 빼서, B는 회사 쪽 항목인 추심입금 500,000을 은행 잔액에서 또 빼서 나온 금액이다.

② X 해설 B는 맞지만 A는 190,000을 910,000으로 잘못 적은 입금을 반대로 처리했다 — 장부가 720,000 많으니 수정 전 잔액도 그만큼 크다.

③ O 해설 B = 은행 잔액 7,810,000 − 미인출수표 2,100,000 = 5,710,000. A는 회사 쪽 조정을 거꾸로 돌린다: 5,710,000 + 부도수표 1,500,000 − 추심입금 500,000 + 과다기장 720,000(910,000−190,000) = 7,430,000.

④ X 해설 A는 맞지만 B는 회사 쪽에서 과다기장 720,000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7,430,000−1,500,000+500,000) — 은행 쪽 결과 5,710,000과 맞지 않는다.

⑤ X 해설 미인출수표 2,100,000은 은행 잔액에서만 빼는 항목인데 회사 쪽에도 넣어 A가 부풀었고, B는 미인출수표 대신 추심입금을 은행 잔액에서 뺐다.

66 회계학 · 재무회계 · 재무비율 분석 정답 ⑤

① X 해설 같은 금액이 분자·분모에 함께 더해져도 비율이 1이 아니면 값이 바뀐다 — 당좌비율 50%, 유동비율 150%라 둘 다 움직인다.

② X 해설 방향이 거꾸로다 — 1보다 작은 당좌비율(120,000/240,000)은 오르고, 1보다 큰 유동비율(360,000/240,000)은 내린다.

③ X 해설 당좌비율은 120,000/240,000=50%에서 170,000/290,000≒58.6%로 오른다 — 1보다 작은 비율은 같은 금액을 더하면 올라간다.

④ X 해설 유동비율은 360,000/240,000=150%에서 410,000/290,000≒141%로 내린다 — 1보다 큰 비율은 같은 금액을 더하면 내려간다.

⑤ O 해설 유동부채 = 880,000−540,000−100,000 = 240,000. 차입 50,000이 현금과 유동부채를 함께 늘려 당좌비율 50%→58.6%(증가), 유동비율 150%→141%(감소).

67 회계학 · 재무회계 · 주당이익 정답 ①

① O 해설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2,000주 중 공정가치분 1,600주(2,000×1,600÷2,000)를 뺀 400주는 무상증자(400÷8,000=5%). 주식수 = 6,400×1.05×1.2 + 1,600×1.05×1.2×9/12 = 9,576주. EPS = (1,353,360 − 300,000) ÷ 9,576 = 110.

② X 해설 7월 1일 무상증자 20%는 그 전부터 있던 주식에 소급한다 — 기초 주식은 1월부터, 유상증자분은 4월부터 있던 것으로 센다.

③ X 해설 공정가치보다 싸게 판 유상증자에는 무상증자 몫이 섞여 있다 — 그 400주는 기초부터 있던 것으로 보고 가중평균에 넣는다.

④ X 해설 기본주당순이익의 분자는 보통주 몫 이익이다 — 우선주배당 300,000(5,000주×60)을 당기순이익에서 먼저 뺀다.

⑤ X 해설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는 기말 10,080주보다 적은 9,576주다 — 4월 유상증자의 공정가치분은 9개월만 센다.

68 회계학 · 재무회계 · 현금흐름표 정답 ①

① O 해설 800,000 − 토지처분이익 100,000 − 매출채권(순액) 증가 160,000(165,000−5,000) + 매입채무 증가 80,000 + 감가상각비 120,000 = 740,000. 손상차손은 순액 증감에 이미 들어 있고, 개발비 지출은 투자활동이다.

② X 해설 매출채권 순액 증감을 쓰면서 손상차손 20,000을 또 더한 금액이다 — 손상차손은 순액 증가 160,000 안에 이미 반영됐다.

③ X 해설 토지처분이익 100,000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 처분대가 전체가 투자활동 유입이라 영업활동에서는 그 이익을 뺀다.

④ X 해설 매출채권 순액 증가 160,000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 외상으로 늘어난 매출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현금이다.

⑤ X 해설 개발비 지출 180,000은 무형자산을 사는 데 쓴 돈이라 투자활동이다 — 영업활동 현금흐름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

69 회계학 · 재무회계 · 현금흐름표 정답 ②

① X 해설 선급이자 증가 700을 더하지 않고 뺀 금액이다 — 선급이자가 늘었다는 것은 비용보다 현금을 더 냈다는 뜻이다.

② O 해설 현금이자지급액 = 이자비용 3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 3,000(현금 아님) − 미지급이자 증가 1,400(5,200−3,800) + 선급이자 증가 700(2,700−2,000) = 26,300.

③ X 해설 미지급이자 증가 1,400을 빼지 않고 더한 금액이다 — 미지급이자가 늘면 비용 중 그만큼은 아직 현금으로 나가지 않았다.

④ X 해설 상각액 3,000을 빼지 않고 더하고, 선급이자 증가 700도 거꾸로 뺀 금액이다(30,000+3,000−1,400−700).

⑤ X 해설 세 조정을 모두 거꾸로 한 금액이다 (30,000+3,000+1,400+700) — 상각액과 미지급 증가는 빼고, 선급 증가는 더한다.

70 회계학 · 재무회계 · 이익잉여금과 배당 정답 ⑤

① X 해설 누적분을 빠뜨리고 당기 배당만 나눈 금액이다 (1,500,000 + 남은 4,200,000의 1/3) — 누적적 우선주는 못 받은 2년치를 먼저 받는다.

70 해설 계속 정답 ⑤

② X 해설 연체를 1년분만 넣은 금액이다(1,500,000+1,500,000+900,000) — 20x1·20x2년 두 해 배당이 밀렸다.

③ X 해설 3년치 우선배당(1,500,000×3)만 주고 참가분을 빠뜨린 금액이다 — 완전참가적이라 잔여 1,200,000의 1/3을 더 받는다.

④ X 해설 잔여 1,200,000을 주식 수 비율(3,000주:12,000주)로 나눠 240,000만 더한 금액이다 — 참가는 자본금 비율(1:2)로 한다.

⑤ O 해설 연체 2년분(20x1·20x2) 3,000,000 + 당기 우선주 1,500,000(30,000,000×5%) + 보통주 1,800,000(60,000,000×3%) = 6,300,000, 남은 1,200,000을 자본금 비율 1:2로 참가해 우선주 400,000. 우선주 = 3,000,000 + 1,500,000 + 400,000 = 4,900,000.

71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원가의 개념과 제조원가의 흐름 정답 ③

① X 해설 재료매입액은 사용액 52,000에 기말 13,000을 더하고 기초 17,000을 뺀 48,000이고, 영업이익 15,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매출원가로 쓴 값이다.

② X 해설 재료매입액은 맞지만 영업이익은 당기제품제조원가 155,000을 매출원가로 써서(180,000−155,000−10,000) 나온 금액이다 — 제품 재고 증감을 반영해야 한다.

③ O 해설 매출원가 = 180,000÷1.2 = 15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155,000 → 당기총제조원가 150,000. 간접원가 65,000(150,000−85,000), 노무원가 33,000, 재료원가 52,000 → 매입액 = 52,000+13,000−17,000 = 48,000, 영업이익 = 180,000−150,000−10,000 = 20,000.

④ X 해설 52,000은 직접재료 사용액이다 — 매입액은 사용액에 기말재고 13,000을 더하고 기초재고 17,000을 빼야 나온다.

⑤ X 해설 재료 사용액을 매입액으로 적었고, 영업이익은 이익을 매출액의 20%로 보아 매출원가를 144,000으로 잡은 금액이다(180,000−144,000−10,000).

72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개별원가계산과 정상원가계산 정답 ①

① O 해설 예정배부율 = 600,000 ÷ 20,000시간 = 30, 예정배부액 = 18,000시간 × 30 = 540,000. 실제 650,000보다 110,000 과소배부라 매출원가를 늘려 매출총이익 = 400,000 − 110,000 = 290,000.

72 해설 계속 정답 ①

② X 해설 배부차이는 실제 발생액 650,000과 예정배부액 540,000의 차이 110,000이다 — 예산 600,000이나 예정조업도와 견주지 않는다.

③ X 해설 배부차이를 조정하지 않은 금액이다 — 과소배부 110,000만큼 매출원가를 늘려야 한다.

④ X 해설 과소배부는 실제 원가가 배부액보다 많다는 뜻이라 매출원가를 늘리고 이익을 줄인다 — 이익이 400,000보다 커질 수 없다.

⑤ X 해설 과소배부 110,000을 매출원가에서 빼 이익에 더한 금액이다 — 덜 배부한 원가는 매출원가에 더한다.

73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결합원가계산 정답 ③

① X 해설 결합원가는 추가가공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드는 원가라 가공 여부 결정에 쓰지 않는다 — 증분수익과 추가가공원가만 견준다.

② X 해설 세 제품을 모두 추가가공한 금액이다 — X는 증분수익 3,000이 추가가공원가 3,500보다 작아 분리점에서 팔아야 500이 더 남는다.

③ O 해설 결합원가 총액 = 15,000 ÷ 30%(X 분리점 판매가치 30,000/100,000) = 50,000. 증분이익: X 3,000−3,500 = −500(분리점 판매), Y 10,000−5,000, Z 10,000−7,500(가공). 이익 = 30,000 + 25,000 + 52,500 − 50,000 = 57,500.

④ X 해설 82,000이 되려면 결합원가가 25,500이어야 한다(120,000 − 12,500 − 25,500) — 결합원가 총액은 X 배부액 15,000을 판매가치 비중 30%로 나눈 50,000이다.

⑤ X 해설 120,000은 최적 결정 때의 매출액(30,000+30,000+60,000)이다 — 결합원가 50,000과 추가가공원가 12,500을 빼야 이익이다.

74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활동기준원가계산 정답 ①

① O 해설 활동별 배부율: 생산준비 160(200,000÷1,250)·재료처리 300·기계작업 10·품질관리 40. 간접원가 = 60×160 + 50×300 + 4,500×10 + 500×40 = 9,600+15,000+45,000+20,000 = 89,600. 기본원가 = 300,000 − 89,600 = 210,400.

② X 해설 생산준비 원가 9,600(60시간×160)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 생산준비 배부율은 200,000÷1,250시간 = 160이다.

74 해설 계속 정답 ①

③ X 해설 재료처리 원가 15,000(50회×300)을 빠뜨린 금액이다 — 재료처리 배부율은 300,000÷1,000회 = 300이다.

④ X 해설 품질관리 원가 20,000(500회×40)을 빠뜨린 금액이다 — 품질관리 배부율은 400,000÷10,000회 = 40이다.

⑤ X 해설 기계작업 원가 45,000(4,500시간×10)을 빠뜨린 금액이다 — 기계작업 배부율은 500,000÷50,000시간 = 10이다.

75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변동원가계산과 전부원가계산 정답 ②

① X 해설 기초·기말 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차이 15,000을 거꾸로 뺀 금액이다 — 기초재고에 담긴 40,000이 더 커서 변동원가 이익이 크다.

② O 해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20x1년 40(200,000/5,000), 20x2년 25(250,000/10,000). 선입선출이라 20x2년 기초 1,000개에 40,000, 기말 1,000개에 25,000이 담긴다. 변동원가 이익 = 100,000 − 25,000 + 40,000 = 115,000.

③ X 해설 120,000은 정답보다 5,000 많다 — 기초재고에서 넘어온 고정원가 40,000은 더하고, 기말재고로 넘긴 고정원가 25,000(1,000개 × 25)은 뺀다.

④ X 해설 135,000이 되려면 기말재고에 담긴 고정원가가 5,000이어야 한다 — 기말 1,000개 × 25 = 25,000이다.

⑤ X 해설 기초재고에서 풀린 고정원가 40,000만 더하고 기말재고로 넘어간 25,000을 빼지 않은 금액이다.

76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표준원가계산과 원가차이분석 정답 ③

① X 해설 ㄱ이 틀렸다 — 표준원가는 원가를 얼마로 잡을지의 문제라 변동원가계산과도 함께 쓸 수 있다.

② X 해설 ㄷ은 옳지만 ㄱ이 끼었다 — 원가 범위(전부·변동)나 집계 방식(개별·종합)과 상관없이 표준을 정해 쓸 수 있다.

③ O 해설 표준원가는 종합원가계산에도 쓰고(ㄴ), 재료 능률차이는 (실제 사용량 − 표준수량) × 표준가격이라 가격차이를 언제 분리하든 같다(ㄷ).

76 해설 계속 정답 ③

④ X 해설 ㄹ이 틀렸다 —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차이는 실제 발생액에서 고정예산을 뺀 것이고, 투입량·산출량 변동예산의 차이는 능률차이다.

⑤ X 해설 ㄹ이 끼었다 —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예산이 같아 투입량 기준과 산출량 기준 예산이 같고 능률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77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관련원가와 단기의사결정 정답 ④

① X 해설 주문 1,500단위 전부만큼 기존 판매를 잃는다고 본 금액이다(195,000 − 1,500×200) — 여유능력 1,000단위를 넘는 500단위만 포기한다.

② X 해설 포장비 20을 빠뜨리고 1,500단위 전부의 공헌이익을 잃는다고 본 금액이다(1,500×150 − 1,500×200).

③ X 해설 포기하는 500단위의 매출액 250,000을 통째로 기회비용으로 본 금액이다 — 잃는 것은 공헌이익 100,000(500×200)이다.

④ O 해설 여유능력은 1,000단위라 1,500단위를 받으면 기존 판매 500단위를 포기한다. 증분이익 = 1,500 × (450 − 320) − 500 × (500 − 300) = 195,000 − 100,000 = 이익 95,000.

⑤ X 해설 기존 판매 500단위를 포기하는 기회비용 100,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 8,000+1,500단위는 최대생산능력 9,000단위를 넘는다.

78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 정답 ③

① O 해설 변동비율이 60%(1 − 공헌이익률 40%)라 매출액 = 총변동원가 240,000 ÷ 0.6 = 400,000이다.

② O 해설 손익분기 매출 150,000(60,000÷0.4)을 넘는 250,000이 안전한계라 안전한계율 = 250,000 ÷ 400,000 = 62.5%다.

③ X 해설 영업레버리지도 = 공헌이익 160,000 ÷ 영업이익 100,000 = 1.6이다 — 안전한계율의 역수 (1÷0.625)로도 1.6이 나온다.

④ O 해설 영업이익 100,000(공헌이익 160,000 − 고정원가 60,000)에서 세금 20%를 빼면 세후 80,000이다.

⑤ O 해설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원가 60,000 ÷ 공헌이익률 0.4 = 150,000이다 — 이때 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같아진다.

79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원가-조업도-이익(CVP) 분석 정답 ⑤

① X 해설 같은 구간 안에서는 고정원가가 일정해 많이 팔수록 이익이 늘어난다 — 구간마다 최대 조업도만 견주면 된다.

② X 해설 15,000은 어느 구간의 끝 조업도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 5,000단위에서 공헌이익 600,000이 고정원가 540,000을 60,000 넘는다.

③ X 해설 고정원가가 뛰는 구간 첫머리(2,001·4,001단위)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난다 — 이익은 구간 끝에서 따진다.

④ X 해설 4,000단위 구간의 이익(480,000−450,000)이다 — 5,000단위까지 늘리면 고정원가가 90,000 늘지만 공헌이익이 120,000 늘어 더 남는다.

⑤ O 해설 단위당 공헌이익 120(300−180). 구간 끝에서 이익이 가장 크다: 2,000단위 240,000−300,000 = −60,000, 4,000단위 480,000−450,000 = 30,000, 5,000단위 600,000−540,000 = 60,000 → 최대 60,000.

80 회계학 · 원가관리회계 · 종합예산 정답 ④

① X 해설 1월 외상매입 중 2월에 갚는 80%(1,345,000×80%)만 적고 2월 현금매입 1,100,000을 빠뜨린 금액이다.

② X 해설 2월 매입 2,200,000의 현금매입 절반만 적은 금액이다 — 1월 외상매입 대금 1,076,000도 2월에 나간다.

③ X 해설 1월 외상매입 총액(2,690,000×50%)이다 — 그중 80%만 2월에 치르고 나머지 20%는 3월에 치른다.

④ O 해설 매출원가 = 매출 ÷ 1.2: 1월 1,850,000, 2월 2,100,000, 3월 2,350,000. 매입 = 매출원가 + 기말(다음 달의 40%) − 기초: 1월 2,690,000, 2월 2,200,000. 2월 지출 = 현금매입 1,100,000 + 1월 외상 1,345,000 × 80% = 2,176,000.

⑤ X 해설 1월 외상매입 1,345,000을 모두 2월에 갚는다고 본 금액이다(1,100,000+1,345,000) — 2월 지급분은 그 80%다.